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OCIO 시장 현황과 개선방안

신민경*

〈요 약〉

국내 OCIO 시장은 한 번에 수천억 많게는 수십조 원의 돈이 오가는 '대형 먹거리'다. 이러한 규모에 비해 일부 대형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이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그럼에도 공적자금을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중소형사들은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격전지가 된 OCIO 시장의 현주소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짚어본다.

주제어 : OCIO, 운용사, 증권사, 경쟁, 위탁자

I. OCIO 시장의 현황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시장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가와 운용사 모두의 격전지로 부상해 업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업권 간의 경쟁도 거세다. 레드오션임에도 금융투자 업체들이 시장의 성장성을 점치는 이유는 '위탁기관의 활발한 참여' 때문이다. 최근 이들 기업에 돈을 맡기고자 하는 기금·기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데다 기존 공적기금의 운용자산(AUM)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OCIO란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역할을 외부에 '아웃소싱'(Outsourcing)한다는 의미다. 연기금과 국가기관, 법인 등이 여유자금을 외부 투자전문가인 증권사나 운용사에 일임해 운용하는 체계인 것이다. 전략적 의사결정 권한의 상당부분이 수탁자인 운용기관에 위임되는 만큼 내부 전문 운용인력이 부족한 위탁자 입장에선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많은 기금·기관들이 OCIO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8월 OCIO 도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발주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논문접수일 : 2022년 11월 29일 논문수정일 : 2022년 12월 7일 논문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15일

본고는 신민경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고 준용하였다.

* 환경닷컴 금융부동산부 기자, radio@hankyung.com

지난달부터 첫 위탁운용사 선정에 돌입했다. 지난 6월엔 ‘사랑의열매’로 유명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모금재원에 대한 OCIO를 시작했다. 연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OCIO 대열에 합류했다.

OCIO는 결국 자산운용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 많은 기금·기관들이 OCIO 시장에 발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시황과 관계없이 여윳돈을 운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가 커진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산운용 여건이 나빠지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기금 자산운용을 추진해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한 운용사 OCIO 담당 팀장은 “OCIO는 자산운용을 둘러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사고파는 개념이라고 보면 편하다”며 “국민의 돈을 잘 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인력이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꾸리기 어려운 만큼, 직접 운용이 아닌 외부 위탁을 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자들의 활발한 진입에 운용·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국내 OCIO 시장의 규모는 지난 8월 말 기준 132조 원에 달한다. 시장은 공적기금의 여윳돈 증가에 따라 해마다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132조 원 규모의 시장을 자금별로 구분하면 공적기금이 전체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약 112조 원인데 운용사와 증권사가 각각 86조 원, 26조 원씩 나눠 갖고 있다.

2019년 당시 자본시장연구원이 집계한 공적기금 규모가 85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 사이 32%나 늘어난 셈이다. 공적기금의 목적 자체가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기금의 사업상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인 만큼, 부처별로 기금 규모를 여유있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공적연금을 뺀 남은 비중은 조 단위 사내 유보금을 외부에 맡기길 원하는 ‘민간기업’(6%)과 강원랜드·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5%), ‘퇴직연금’(2%), ‘공제회’(1%), ‘대학기금’(1%) 등이 채우고 있다.

이렇게 커진 시장이지만, 맡고 있는 수탁사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운용사 6곳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12곳이 장악하고 있다. 수탁고 점유율은 운용사 72%, 증권사 28%다.

국내 OCIO 시장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산운용업만 보면 전체 시장에서 상위 2곳(삼성·미래에셋)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94%에 달했다. 증권업에서의 상위 기업들의 과점률은 79%로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이 역시도 몇몇 업체에 집중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기금 투자풀’은 우리나라에서 OCIO 형태가 처음으로 도입된

사례로 불린다. 현재 이 돈을 관리하는 주간운용사는 두 곳(삼성 26조 1,470억 원 · 미래 10조 8,489억 원)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제도 도입 시기인 2001년 말부터 줄곧 20년 넘게 주간운용사 지위를 유지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작년 4월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당초 주간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단독 체제였지만 2013년부터 복수운용 형태로 바뀌었다. 이 시기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첫 복수주간사로 낙점돼 8년 동안 자금을 운용했지만, 작년 4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밀려 자리를 내줬다.

연기금투자자들은 자산운용에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형 공적기금들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점에서 OCIO의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여러 기금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등은 2015년 7월부터 전담자산운용 체계를 도입했다.

9조 5,000억 원 규모 고용보험기금은 증권사를, 22조 원 규모 산재보험기금은 자산운용사를 운용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전담자산운용기관은 한국투자증권이다. 산재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이다. 두 운용기관의 고용 · 산재기금 여유자금 위탁계약기간은 모두 내년 6월까지로 재선정이 임박했다. 이들 주간사 지위를 빼앗으려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내년 재선정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올 상반기 재선정을 마친 상태다. 직전 2기 전담 운용사였던 미래에셋자산운용과 NH투자증권이 또 한 차례 선정된 것. NH투자증권은 2018년 입찰 당시 1기 전담 운용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을 제치고 선정된 뒤 다시 한 번 자리를 사수하게 됐다.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앞선 2014년부터 8년간에 이어 올해부터 다시 4년 동안 기금운용을 전담하고 있다. 이들 2개사는 2026년 6월 말까지 4년간 43조 원가량의 주택도시기금운용을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위탁자 참여로 OCIO 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은 공적기금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왔다면, 앞으로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자금이 새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공기업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해 OCIO의 잠재적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 운용사 OCIO 담당 팀장은 “대부분의 공적기금들은 OCIO 시장에 진출한 상태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아직 노다지에 가깝다”며 “큰 규모의 자체 자금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속속 들어오면 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점 형태가 굳어진 ‘공적기금 부문’과 최근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공공기관 부문’ 외에도 시장은 여러 유형의 위탁자산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OCIO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금융회사들이 틈새시장으로 새 유형의 세부시장을 개척한 결과다. 특히 전문가들이 업계의 미래 주요 먹거리로 꼽는 세부시장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OCIO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서 대행하는 것을 뜻한다.

퇴직연금 제도는 증권업의 OCIO 시장에 들어선 직접적인 배경이지만, 아직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의 시장 유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집계한 현재 퇴직연금 DB 적립금의 OCIO 운용 규모는 약 2조 원이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DB 적립금 규모는 171조 5,000억 원으로, 이 중 1.2%의 자금이 OCIO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부 자산운용업의 수탁고여서 증권업의 시장 참여는 전무한 상황이다.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컨설팅부 임원은 “계약형 퇴직연금 대비 기금형 퇴직연금의 장점이나 차별화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의미한 유입을 포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I. OCIO 시장의 문제점

‘건전한 경쟁구도 부재로 레드오션화된 과점 시장.’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OCIO 시장 성장 가능성과 완전위임 확대 필요성’에서 현재 국내 OCIO 시장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공적연금투자펀드가 조성된 지 21년이 흐른 만큼 연차만 보면 시장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결만 성장했을 뿐 속을 보면 판판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형사들의 과점 체계가 굳어지고 경쟁 구도가 사라지면서 시장엔 ‘레드오션’ 우려까지 불거진다.

전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공적기금을 중심으로 업계 안팎에선 다양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먼저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지적된다. 약자가 뒤처지고 강자가 독식하는 ‘약육강식’의 구도가 일찍이 잡힌 탓에 후발주자들의 진입 허들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연기금투자펀드와 산재보험기금 등 대형 OCIO를 운용 중인 삼성자산운용은 작년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자산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데 이어 올 들어선 강원랜드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주간운용사 지위도 따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연기금투자펀드와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을 맡고 있고 올해 4월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업무를 따냈다.

NH투자증권은 증권사들 가운데 압도적인 운용 경력(트랙레코드)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만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강원랜드 등 유치에 연달아 성공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용보험기금의 전담 자산운용기관이다.

당장 올해만 봐도 양대 운용사와 NH투자증권이 대부분의 OCIO를 따냈다. 입찰에 나섰다 하면 이번 없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양대 운용사는 최근 들어서 ‘신사협정’이라도 맺은 듯 번갈아 응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지난 3월 주택도시기금 입찰에 미래에셋운용이 단독 참가하고, 7월 중퇴기금 입찰엔 삼성자산운용이 홀로 응찰한 바 있다. 기존 운용기관이나 유력 운용기관의 단일 지원으로 경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 OCIO 담당 한 임원은 “증권사들이 OCIO 시장에 뛰어들 주된 배경은 퇴직연금이다. DB와 DC형 시장이 발전해서 국민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하는데, 제한된 한두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가입 고객들이나 회사 입장에서선 제한된 선택지를 갖는 셈”이라며 “시장 플레이어들이 많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없어 서비스 개선과 개발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점기업이 사업상 차질을 겪으면 대국민 서비스에 부담이 작용한다”며 “여러 대의명분을 감안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후발주자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낮은 보수율’도 OCIO 시장 성장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운용보수는 운용대상인 기금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로, 성과보수(초과수익률에 따른 인센티브)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에선 사실상 OCIO 운용기관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다. 우리나라 OCIO 운용 보수율은 대체로 3bp(1bp=0.01%) 안팎이다. 8bp가량으로 유지되는 해외와 비교하면 절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운용기관들의 경쟁이 심한 탓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금이 운용기관 선정 시 ‘엄격한 전담운용체계’를 요구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산재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대형 공적기금은 응찰 기업들로부터 전담조직 구성원을 제출받는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심사에서 ‘전담 조직의 규모’, ‘전담 인력의 전문성’, ‘조직 내 업무별 분업화’, ‘전담조직의 사내 독립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 내부에 ‘투자포사업본부’라든가 ‘주택도시기금운용부문’ 등 기금 이름을 딴 부서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기금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대형 기금이 전담 체계를 고집할수록 중소형 기금이 OCIO 제도 도입을 주저하게 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문제는 최근 들어 1조 원 미만의 작은 기금·기관들도 전담 체계를 원한다는 점이다. 제안요청서(RFP)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알아서 전담조직을 꾸려서 입찰한다. 주간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다. 한 자산운용사의 OCIO 담당 부장은 “위탁사에

인력 현황을 제출하기 전에 ‘경쟁사에서 몇 명 규모로 낸다더라’하는 소식이 들리면 무조건 그보다 많은 인원수를 적어야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며 “수천억 원 규모의 중소 OCIO에도 전담인력 12~13명이 달라붙는 지경이 됐다”고 전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점적 전담인력은 30명을 웃도는데 운용보수율은 3bp도 채 안 되는 비정상적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용 역량과 성과를 두고 겨뤄야 하는데 실상은 보수나 투입 인력 같은 외형적 경쟁만 치열해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용기관의 위임 범위 확대’도 아직 진행형인 과제다. OCIO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위탁사들이 운용기관에 전략적 자산배분을 비롯한 상위 의사결정의 역할을 맡기지 못하고 있다. 완전위임이라기보다는 부분위임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하위 운용사 선정과 포트폴리오 구축’ 등에 그치고 있는 현 운용기관의 역할을 ‘대부분의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OCIO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선 자산배분 권한부터 허용돼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의견이다.

Ⅲ. OCIO 시장의 개선방안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시장은 급격한 성장 때문인지 벌써부터 문제가 만연화되는 분위기다. 비합리적인 보수율, 의무화되다시피 한 전담체계, 독과점 우려 등이다. 시장에서는 기금들이 OCIO 시장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결정 주체인 위탁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금 입장에서선 업계의 이런 불만이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여윳돈을 잘 굴리기 위해 트랙레코드(운용경력)이 풍부한 대형사를 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사가 시장을 독점한다고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수율을 낮춰도 참여 기업들은 여전한 상태다. 때문에 갑자기 보수를 높일 유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는 사이 시장은 특정 운용사나 증권사로 기금 여윳돈이 쏠리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은 갈수록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기금운용은 당장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직간접적으로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 연기금투자자와 산재보험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기금 대부분이 비슷한 기준으로 뽑다보면 운용방식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최근과 같은 증시 하락장이나 위기 상황에서 방어력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

OCIO 시장을 연구해온 한 전문가는 “위탁자가 시장 성장을 위해 굳이 운용경력이 부족한

기업을 뽑을 유인은 없다”며 “위수탁 관계에선 위탁자 입장이 우선이며 수탁자는 ‘선의의 수탁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학계·연구계의 도움을 받고 있다. 기금을 설득할 논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시장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다. 우선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운용기관을 선정할 때 ‘사업자 다양성’ 또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평가항목대로라면 △기업규모가 크고 △전담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원수가 많고 △앞선 OCIO 사업에서 양호한 운용성과를 냈고 △비교적 낮은 운용보수율을 제시한 곳일수록 선정 가능성이 크다. 기금 유치 이력이 적거나 없는 후발주자와 중소형사로선 항목 한 개도 제대로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주간사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면 독점 체제를 지양하고 기업들이 서로 건전히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금들이 선두주자와 후발주자를 보다 공평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용보수율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금들은 주간운용사 선정 제안요청서에 추정 보수율을 적는데, 이는 기금이 줄 수 있는 최대 보수를 뜻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보수율 상한에 맞춰 기금에 써내는 기업들은 없었다.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엔 보수율의 60% 밑으로 써내면 보수 점수에서 0점을 받게 된다. 사실상 보수율 하한도 60%까지로 정해졌다는 얘기다. 다만 눈치경쟁을 벌이다 보니 60%가 하한이자 상한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는 기금이 전향적인 입장에서 태도를 바꾸길 바라고 있다. 보수율에 대한 배점을 낮춘다든지, 기존 60%의 기준을 80% 수준으로 늘린다든지 하는 방안을 기금에게 권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운용보수율 정상화와 함께 ‘성과보수체계의 적극 도입’도 해결책으로 꼽힌다. OCIO의 보수는 크게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나뉘는데, 국내에선 성과보수가 거의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 격인 성과보수는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달성한 초과수익률 만큼 운용기관에 주어진다. 운용보수만으로는 수익성을 챙기기 어려운 증권사, 운용사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전망이다.

전담 운용체계를 취하지 않는 것도 기금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금별로 전담 인력을 20~40명 배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존의 관행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비용 대비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평이다. 한 운용사 OCIO 담당 부장은 “각 운용·증권사가 내부에 단순 운용과 하위펀드 선정, 성과평가, 위험관리 등 일반 자산운용 업무를 하는 10명 미만의 인력을 둔 뒤, 나머지 인력들을 각각의 기금에 대한 전담 인력으로

배치해 운용목표 설정, 컨설팅 등을 맡게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위탁운용 기간 자체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내 OCIO가 해외 대비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짧은 계약기간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OCIO의 계약 기간은 통상 4년 수준인데, 해외에선 10년 이상 같은 OCIO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짧으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만회하기 어렵다. 양호한 성과평가를 받기 위해 손실을 회피하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류두진 성균관대 교수는 “계약기간이 짧으면 장기간에 걸친 투자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국내 OCIO 시장에서 수요자인 기금의 인식과 재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는 풍토를 개선해 기금과 OCIO 사이에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운용기관들의 불만을 기금들이 항상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까지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해 △주간운용사 겸임운용 허용 △완전위탁형 성과보수제 도입 △사업기간 연장제도 도입 등 운용기관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위탁자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OCIO 시장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운용·증권사들도 결국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힘을 줄이기 마련이다. 기금이 기업들에 대한 성의를 보일수록 OCIO 서비스의 질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며 “응당한 대가 지불이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장 성장의 핵심이 될 듯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 스스로도 시장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보수율과 전담체계 등 시장의 케케묵은 불만들이 학회 테이블에서만 논의될 뿐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며 “법정협회인 금융투자협회 산하에 OCIO 관련 기구를 만들어 업계 의견을 즉각 수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은 다르지만 ‘업종별 협회 중심의 OCIO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목소리도 나왔다. OCIO를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을 위한 방안이다. 철강 업종이면 협회, 게임 업종이면 게임산업협회가 OCIO 전반의 업무를 위임 받아 회원사들의 자금 운용과 관리를 도와주자는 얘기다. 신중철 에프앤가이드 고문은 “수많은 기업들이 비용 문제로 OCIO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내부에 기금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조직을 두고 산하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대리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부시장인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제언이 나온다. DB형 적립금의 원활한 시장

유입을 위해선 퇴직연금 운용 규제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아직 일임위탁은 퇴직연금 운용 수단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OCIO 시장으로 들어온 2조 원 규모 DB 적립금이 모두 사모펀드로 설정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기업들로선 사모단독펀드의 설정이 허용되지 않아 대형 사업장이 단독으로 OCIO 위탁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임위탁 허용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 고 문 헌

- 남재우, “국내 OCIO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이슈보고서, 2019, 1-22.
- 남재우, “OCIO 시장 성장 가능성과 완전위임 확대 필요성”, 이슈보고서, 2022, 1-20
- 류두진, 박대현, “OCIO의 대리인 문제”, 금융연구, 제34권 제3호, 2020, 33-60.
- 박대현, 류두진, “OCIO 시장에서의 경쟁: 게임이론의 응용”, 한국증권학회지, 제50권 제5호, 2021, 497-520.
- 신중철, 박래수, 정재만, “OCIO 사업발전을 위한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 선물연구, 제28권 제1호, 2020, 103-134.
- 이명섭, 박선영, 최형석, “투자폴 성과기반 경쟁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정책연구용역, 2021, 1-171.